

이명박 정권에는 인권이 없다

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30%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

국가인권위의 축소는

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겠다는 말입니다.

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30%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. 국가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시 강제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. 이명박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해 촛불시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등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을 비판하자 인권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, 행안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에 대해 ▲부산·광주·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 폐쇄 ▲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▲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의 내용으로 조직을 30%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

국가인권위의 조직이 축소된다면, '장애인 차별금지법'을 무의미하게 만들고, 이주민, 성소수자, 청소년 인권 등의 정책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 한국사회에서 '인권'을 사라지게 만들고 인권이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언어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30% 축소 방침은 '효율성'을 핑계로 하는 깊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.

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무조건 '밀어부치기식'으로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·반인권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정권이 바뀌고 인권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지금,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. 이 서명에 꼭 동참하여 주십시오.

서명에 동참하여 주세요!

이름	주소	이메일 주소	지지의 한마디

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